



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
인권보호관 손우장

전화 041-620-4326/ 팩스 0502-193-5094

보도자료
2022. 1. 5.(수)

제 목 **2022년 양대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**

-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(지청장 강형민)은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(3. 9.)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(6. 1.)에 대비하여, 금일(1. 5.)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
-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긴밀히 협조하여 ‘금품수수’, ‘허위 사실유포 등 여론조작’, ‘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’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
-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1. 12. 9. ‘선거전담수사반’을 편성,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임

1 회의 개요

- 일시 · 장소
 - 2022. 1. 5.(수) 14:00~15:00,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중회의실
- 참석자
 - 검 찰 : 공공·기업범죄 전담부장, 전담검사, 수사관 등 3명
 - 선관위 : 천안시 동남구·서북구, 아산시 선관위 지도계장 등 3명
 - 경 찰 : 천안동남·서북경찰서, 아산경찰서 전담 팀장 등 3명

2

주요 회의 내용

● 『중점 단속대상 범죄』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

- 금품수수,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,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'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'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

중점 단속대상 범죄

- **금품수수** : ▲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, ▲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, ▲후보 단일화 관련된 금품 제공·요구, ▲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
- **여론조작** : ▲유튜브·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, ▲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, ▲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
- **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** : ▲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선·선거 개입, ▲불법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, ▲선거자유방해 수사 등

※ 특히,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접촉 선거운동 대신 온라인·비대면 선거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력이 광범위한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여론조작 등에 신속·엄정 대응 예정

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

-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, 검사실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누어 지정·전담하여 각 전담 관내 선관위, 경찰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
-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보고, 사전 협의 등 협조체계 강화

- **신속·공정한 수사 및 적법절차 철저 준수**

-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쏠 단계에 있어서 검찰, 선관위, 경찰이 상호 협조하여 진행
- 제보자 보호 및 피의자 인권보장,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 적법 절차 철저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

3 **향후 계획**

-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대통령선거일 D-90인 2021. 12. 9. 선거전담 수사반(반장 : 공공·기업범죄 전담부장 조석규)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,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2. 12. 1.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예정
- 검찰, 선관위, 경찰은 수사대상자의 신분, 지위,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'법과 원칙'에 따라 수사하며,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선거사범 신고센터

- ▶ **검찰**

- 국번없이 1301, (041) 620-4426,4429, <http://www.spo.go.kr/cheonan> (신고민원포탈)

- ▶ **선거관리위원회**

- 국번없이 1390, <http://www.nec.go.kr> (국민참여소통)

- ▶ **경찰**

- 국번없이 112, <http://www.police.go.kr> (신고민원포탈)